'5·31지방선거' 특별기고

잘못된 정책 고집 땐 '무능정권' 기록될 것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을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면 다행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동안의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실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가난' 현상을 양극화로 호도

첫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 하에 이른바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값나가는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 정책 등으로 건설 시장을 얼어붙게 하였다. 이는 물론 부동산의 가격 결정 원리와 재산권 및 투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위 관료들이 앞다퉈 거품붕괴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부동산 관련 법률을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렵게 하겠다고 공언하며 은연중에 백성들을 겁주고 있다. 백성들 겁주는 정부를 지지할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둘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영권 상속을 둘러싼 기업인 수사 등으로 기업환경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바닥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니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기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가난' 현상을 엉뚱하게 양극화로 호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소득 계층별 분포 추이(2001-2005년)'를 보면, 상류층은 중산층으로, 중하층은 빈곤층으로 하향 이동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원인이고 모두의 '가난'이 그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배 우선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상위 20%를 때리고 나머지 80%의 표를 얻어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20%를 때리면 80%가 먼저 가난해진다. 인기 영합 정책으로 20%는 물론 80%의 표도 달아난 형국을 맞은 것이다.

넷째, 민족 공조와 자주 국방을 내세우면서 친북반미 정책으로 안보 불안을 초래한 것이 사실은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다. 북한 핵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자주 국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 미국도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수상과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지만, 이들 푸들이 이끌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국력은 우리의 국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다.

이웃 일본은 제우스의 방패로 상징되는 바다의 요새인 이지스함을 4척이나 동해 바다에 띄워놓고 있다. 그런 국방력을 갖춘 일본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푸들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이 자국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커녕 독도 상공에 5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비행기 한 대도 없는 한국이 지금 자주 국방을 소리 높이 외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난해하다.

기실 현 정부의 실정은 대부분 좌파 정권의 본질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유 재산권 침해, 무지, 인기 영합적 대중 선동, 책임 회피 등이 그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부 여당은 민

친북반미정책, 안보불안 초래

성(民聲)을 경청하고, 재산권 존중을 비롯한 상식과 원론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선과 오기로 이미 실패로 끝난 정책을 고집한다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의 참패는 물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 단체장 새 당선자 예우·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별도 사무실서 업무보고 등 인수 활동
현직 수준 예우 불구 권한 행사는 못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당선자들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 현직 단체장에 준한 예우를 받는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광주 동·남구청장 등은 6월 1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 행정이 권한대행체제에서 현 단체장 체제로 자동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광주 서·북·광산구청장을 비롯, 전남도내 시장·군수 등 새로 당선된 이들은 업무개시일(취임일)인 오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직 단체장에 준한 예우를 받지만 그에 합당한 권한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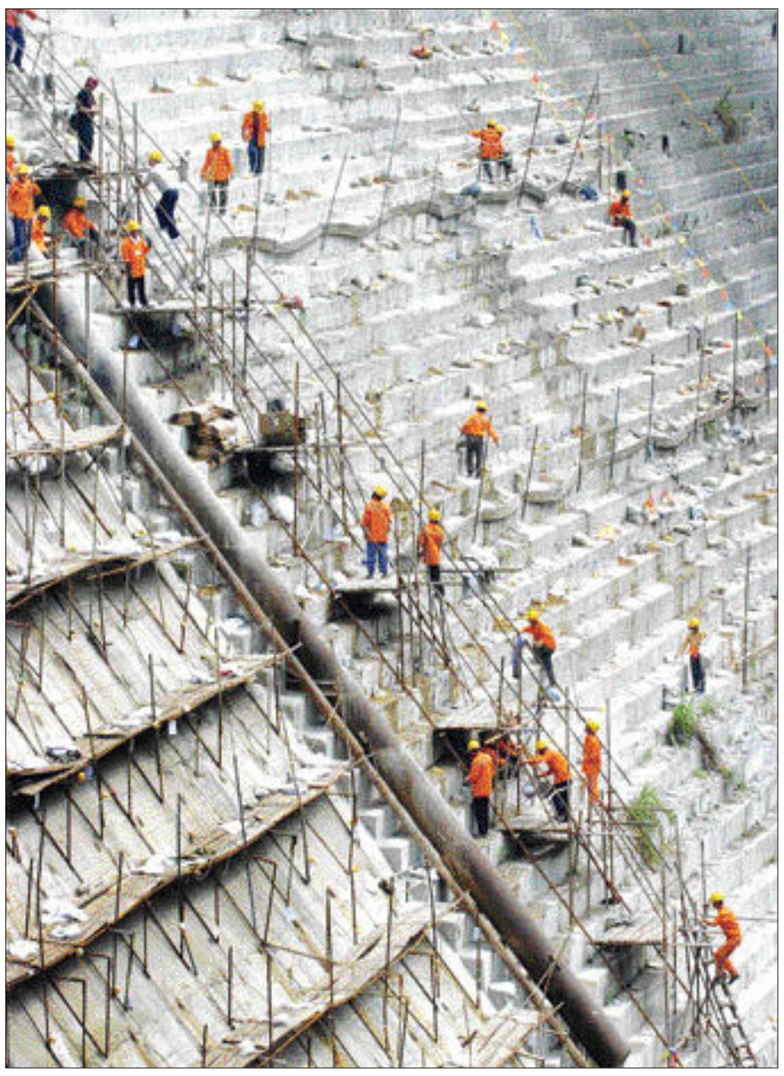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자로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낸 '당선자와 관련된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 기준은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 주관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자는 해당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안에 업무 인수 및 정책 구상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제공(자치단체 청사 제외)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무실 내에 책상과 의자·전화기·팩시밀리·복사기·컴퓨터 등 집기와 물품지원도 가능하지만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업무추진비 등은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소속 공무원·주민등으로부터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당선자 보좌 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자치단체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취임 전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시정방침과 역점추진업무·서류 및 장부목록·재산조서·채권 채무조서·세입세출 예산현계표 등 총 30여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계자인 현 단체장의 서명과 인수자인 당선자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당선자는 이달 중에 업무보고와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마친 뒤,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임무 마친 中 산샤댐 '임시물막이'

2일 중국의 일꾼들이 산샤(三峽)댐을 보호하는 임시물막이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완공된 산샤댐은 길이 2천309m, 높이 185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연합뉴스

0.1%에 울고 웃는 선거 보전 비용

득표율 0.1%에 울고 웃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를 명분으로 후보자가 법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전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의 득표율을 올린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각각 되돌려 받는다.

광주시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 1인당 6억2천100만원, 전남지사는 12억9천300만원에 이며 기초단체장 후보는 광주 1억2천700만~2억700만원, 전남 1억400만~1억7천800만원, 기초의원 후보는 3천만~5천만원 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다.

후보난립…낙선자 대부분 10% 미만

◇0.1%에 희비 갈려=대부분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에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낙선자들 가운데는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모자라 기준 득표율을 채우지 못해 선거비용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후보들이 많다.

강진군 가선거구(제한액 4천300만원) 기초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모 후보는 전체 유효표 1만2천645표 가운데 1천248표(9.9%)를 얻어 불과 17표(0.1%)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했던 민노당 오창규 후보는 10.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불과 '0.1%' 차이로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갈렸다.

또 순천시장을 노리던 민주노동당 이수근 후보는 9.4%,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했던 무소속 신현구 후보는 9.1%를 각각 득표,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발의 차로 놓쳤다. 반면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김점중(10.9%), 무소속 백광준(10.7%) 후보는 기준 득표율을 간신히 넘겼다.

10% 미만 득표해도 당선되면 보전

◇제도상 허점=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후보자가 난립함에 따라 대다수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에 실패,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보통 80~90% 이상의 후보가 10% 이상 득표,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받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다. 물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됨으로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14명이 출마한 곡성 나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3명의 득표율은 각각 11.7%, 10.9%, 8.9%다. 이들 3인의 당선자는 이같은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 모든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8.5%의 득표율로 4위를 한 낙선자는 43표 차이 때문에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기초의원 선거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도 선거비용 보전 규정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 같기 때문이다. 5명 내외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와 10여명 내외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의 비용보전 규정이 같은 것이다.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기준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